



더 불 어

(7·8월)

“성장+균형은 세계적인 추세다”

- ‘2009 지역발전 국제컨퍼런스’ 현장스케치-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국제 협력의 물꼬를 텄다. 지역쫓는 지난 7월8일부터 이틀 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09 지역발전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선진국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정책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나누고,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 세계 각 국가의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일반분과·특별분과·종합토론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성장-균형, 효율-평등, 거버넌스, 그리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지역정책 관련 핵심주제들을 새로운 지평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도시 및 지역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피터 홀 교수(영국 런던대)는 “수도권-지방 2분법을 벗어나 교통·통신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국만의 고유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지역발전의 성공조건으로 ‘접근성’과 ‘인적자원’을 꼽았다. 홀 교수는 또 “세계가 동질화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권마다 독특한 강점이 필요하다”며 “프랑스의 음식산업, 이탈리아의 관광산업처럼 각 지역전통에 기초한 차별화가 지역발전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정책의 관건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럽통합과 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인 안드레아스 팔루디 교수(네덜란드 델프트공대)는 물리적 공간(hard space)보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기업과 주민의 일상생활을 고려한 소프트 공간(soft space)을 강조했다. 팔루디 교수는 “한국의 광역경제권 정책도 교육·의료·문화·복지 등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을 억제했던 프랑스 경험을 소개하면서, “파리가 발전할수록, 주변지역에도 파급효과가 생기는 윈-윈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며 “거점도시와 주변도시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지역정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쫓는 이번 ‘2009 지역발전 국제컨퍼런스’에 이어, 내년에는 동북아 5개국 ‘초광역개발권 국제컨퍼런스’를 추진, 한국·중국·일본은 물론 러시아와 북한까지 아우르는 초국경적인 국제협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2면 계속>

정책 핫이슈

다음은 7월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제컨퍼런스의 3개 일반분과와 1개 특별분과의 주요발언 요지다.

· ·글로벌시대에는 각 지역들도 글로벌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지역경쟁력은 다름 아닌 글로벌경쟁력이며, 이를 위해 성장+균형전략이 요구된다. 지역의 잠재력을 키우면서,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 그것이다.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생겨야, 국가경쟁력도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발전도 가능해진다. 한승수 국무총리(개막식 축사)

· ·지역발전은 계속적인 학습과정의 연속이다. 성장과 균형, 효율과 평등을 놓고,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상충되는 정책적 가치 사이에서 공통의 비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총가 '성장과 균형을 아우르는 발전'이란 개념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상철 위원장(종합토론)

1분과 - 지역발전 단위의 재구성: 경험의 상호교류

· ·프랑스는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을 '지역결속' 과 '지역경쟁력' 이란 2가지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있다. 특히 '기업환경 개선' 과 '인프라 구축' 을 통해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뤄내고 있다.

패트릭 그레제(佛 지역개발기구, DIACI 사무총장)

2분과 - 협력적 지역정책의 모색: 지역간·국가간 이슈

· ·보스턴의 하버드 캠퍼지 지역이나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TP)같은 지역발전 성공사례는 '사회적 공감대' 와 '적절한 인센티브'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 프로세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였다

마리언 펠트만(美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제3분과 -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경쟁력과 창조지역

· ·독일 대도시는 도시역량과 잠재성을 평가한 '도시기능지표' 를 토대로 지역정책이 수립된다. 특히 국가차원의 '대도시 발전정책' 과 지역차원의 '지역 균형정책' 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성장+균형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루퍼트 카프카(獨 지역개발청 프로젝트 매니저)

PRCUD 특별분과 - 신경계지리학의 동향과 시사점

· ·일자리와 자원의 '분산'을 통한 균형정책' 보다는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성장정책' 으로 거점도시-주변도시의 불균형을 줄이는 게 효과적인 지역발전이다. 인프라와 인적자원 측면에서, 한국의 각 지역들이 지금 당장 글로벌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게 현실 아닌가

해리 리처드슨(美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

정책 포커스

5+2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공식출범」

-인프라·선도산업·인재양성+추진기구..광역경제권 본격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4.22)과 시행령을 공포(5.29)함에 따라,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원회) 총 101명의 광역위원 인선을 매듭짓고, 지난 6월 24일 대전에서 광역위원·선도산업 지원단장·거점대학 센터장 등 총 155명이 참석하는 광역위원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

권역별 광역위원회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는 별개의 광역협의체로 운영된다. 구성은 시·도지사가 맡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권역별로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강원권은 12명, 제주권은 14명), 지역총 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을 비롯해 시·도 공동위원장이 나머지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당연직 16명, 위촉직 85명 등 총 101명으로 이뤄진다.

이들 광역위원들은 앞으로 ▶광역계획 수립 ▶광역경제권 시·도간 협력사업 발굴 ▶시·도간 재원분담 ▶광역경제권내 사업관리 및 평가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한 상생·협력을 통한 전략을 펼쳐, 광역화·특성화된 내실있는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권역별 광역위원회 출범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 발표('08.9.21), 지식경제부의 선도산업 세부프로젝트 확정('09.5.6), 교육과학부의 인재양성사업 선정('09.6.12) 등 인프라·산업·인재의 광역경제권 환경이 조성되면서, MB정부의 핵심 지역정책인 광역경제권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009년 6월24일 개최된 광역위원 초청 워크숍

“왜 창조지역인가”

창조지역(creative region)이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못 사는 지역을 위해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도 하고 산업시설과 공업단지도 많이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불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지역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기존 지역개발정책에 새로운 대안으로 창조지역이란 화두가 생겨났습니다.

창조지역 개발은 기존의 지역개발 패러다임과 3가지 점에서 구별 됩니다. 첫째, 소프트웨어적 지역개발 전략입니다. 지역개발 전략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스스로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길은 문화에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는 지역의 예술, 문학, 교육은 물론 지역이 지닌 고유한 삶의 양식으로서 관습, 언어, 축제, 음식, 자연 등을 포함한 역사성과 향토성을 포함합니다. 문화적 지역주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사람도 제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만,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과 패배주의적 소외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문화산업을 살리고 역사성과 향토성을 살려 ‘찾아오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다양성과 차별성을 살린 지역개발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흑백논리의 결과는 공멸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흑색이 있으며 수많은 백색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치즈와 와인이 있습니

다. 학생의 장기를 살리는 것이 교육이라면 지역의 장기를 살리는 것이 창조지역 개발입니다. 창조지역 개발은 다른 지역이 가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창조적 사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셋째, 분권적이고 내발적인 지역개발입니다. 창조적 사고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창조정신을 뜻합니다. 지역 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지방분권의 논리 속에서 가능합니다. 정부와 더불어 지역의 기업과 시민사회가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브랜드를 개발하며 스토리를 만들고, 지역을 장소판촉(place marketing) 하는 것이 새로운 지역개발입니다.

창조적인 지역주의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애국심이며 지역발전의 중심에는 애郷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지역에는 지격(地格)이 있습니다. 지격을 살리는 길이 바로 창조지역 개발입니다. ‘지방방송 ㄸ라’는 지방학대의 시대를 극복하고 지역 간 비교의 비극에서 벗어나 지역상생발전의 시대를 여는 길 역시 창조지역 개발입니다.



위원장 최상철

정책 포커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선정결과 발표」

-6개 광역경제권 12개 선도산업에 총 19개 대학(20센터)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22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 공고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의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별 12개 선도산업에 접수된 47개 대학(49센터)중에서 19개 대학(20센터)이 우수센터로 평가·선정됐다. 선정대학에는 최대 5년간 매년 센터당 50억 원 안팎의 규모로 집중 지원된다.

호남권	선도산업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부품소재	대경권	선도산업	그린 에너지	IT 융복합
	선정대학	목포대/전북대	전남대/조선대		선정대학	금오공대/영남대	경북대/계명대
충청권	선도산업	NEW IT	의약바이오	강원권	선도산업	의료융합	의료관광
	선정대학	한국기술교육대/호서대	순천향대/충남대		선정대학	강원대	한림대
제주권	선도산업	물산업	관광레저	동남권	선도산업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선정대학	제주대	제주대		선정대학	창원대/한국해양대	부경대/부산대

충청권

충남, 청정인삼(서천)·마늘韓牛(태안) 시동

충남의 청정인삼과 마늘韓牛가 웰빙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 서천군은 심은 지 4개월 만에 수확하는 수경재배 청정인삼을 지난 달 선보였다. 지금까지 인삼은 뿌리만 먹는 약용작물이었지만, 서천군이 수경재배한 인삼은 잎·줄기·뿌리 모두를 삶고 샐러드로 먹을 수 있는 웰빙채소로 상품가치를 높였다. 인삼은 식탁에 오르기까지 보통 4~6년이 걸리지만, 수경재배를 통해 농약이나 유해물질이 전혀 없는 청정인삼을 4개월이면 맛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인삼 뿌리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 함량도 기존 재배 2년근 수삼 뿌리보다 8~9mg보다 높은 14.3~15.8mg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마늘韓牛를 친환경 웰빙상품으로 탈바꿈시켜 전국대표 먹을거리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마늘한우'를 특허출원하고, 이듬해 상표등록을 통한 브랜드화에 성공했다. 마늘한우는 육성기에 양질의 조사료를 먹고, 비육기에는 마늘과 보리를 섞어 먹여 키워,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을 포함한 불포화지방산은 높지만 콜레스테롤 함량은 낮아 다른 일반한우보다 맛과 질이 우수하다. 특히 6쪽마늘 사료를 섞어 먹인 소와 먹이지 않은 소의 성분분석 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일반 쇠고기보다 낮아 성인병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 영농조합법인 태안창터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늘한우

대전, 무형문화재 代 끊기나

지역의 소중한 무형문화재가 대를 잇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대전광역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음악·무용·음식·공예·놀이 등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17명(17종목)이 있지만, 이를 계승할 전수조교는 5명으로, 전체 종목의 25%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부산시가 보유자 33명(14종목)에 전수조교 51명, 인천시가 보유자 13명(20종목)에 전수조교 17명을 확보한 것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이는 과거와 달리 전통문화 계승에 대한 관심이 낮고, 보유자로 지정돼도 70만원 안팎의 지원금만 지급돼 생활이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인식부족과 함께 장인의식의 부재 등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남권

경남, 국내 1000대 기업 도내 54개 소재

지난해 국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54개가 경남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이 절반인 27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영·진해·양산이 각각 5개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마산 4개, 사천·김해·거제 2개, 진주·함안 1개 등으로 조사됐다. 창원시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보 DB인 코참비즈의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전국 매출액 100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창원에 본사를 둔 기업은 27개사로 2007년의 25개사보다 2개사가 늘었다. 창원은 지난해 국내 수출 4,224억 달러의 5%인 211억 달러, 경남수출과 생산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경남지역과 국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경권

경북, 봉화에 국립수목원 확정



▲봉화군 국립수목원 예정지 '문수산' 전경

경상북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국립 수목원이 생긴다. 경북도는 최근 봉화 춘양 옥석산 주변 5,000ha에 추진해오던 '국립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유치에 확정했다고 밝혔다. 수목원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2천300억 원을 들여 ▶백두대간 생태연구센터 ▶기후변화를 알려주는 식물로 구성되는 지표식물원 ▶지하 200m의 종자저장고 ▶생태교육과 홍보시설 ▶생태탐방시설 등을 갖춘 세계적인 규모로 조성된다. 또 수목원은 건설단계에서 3,600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함께 3,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목원이 문을 열면 매년 17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지역총생산이 61억원 가량 증가하고, 석·박사급 연구원 90명을 포함한 330명의 고용증가도 예상된다.



호남권 호남농업 10년새 어떻게 변했나

10년 전에 비해 호남지역 농가인구(40만명 감소)와 경지면적(3만9,145ha 감소) 작물재배면적(3만5,986ha 감소)은 모두 줄어든 대신, 축산농가의 대형화와 기계화로 가축 사육두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호남 농업의 어제와 오늘 - 10년전과 비교한 호남의 농업 변화상’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호남권 농가가 34만 4,467호로 10년전에 비해 8만3,165호(19.4%) 줄었고, 농가 인구수도 10년새 전남 22만명을 비롯해, 전북 14만명, 광주 700명 등 약 40만명 가까이 감소한데다, 경지면적과 작물재배면적 등에서도 산업화와 고령화로 인한 탈농 및 농촌공동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축사시설 현대화로 대규모 사육농이 늘고, 육류 소비량이 늘면서 사육두수는 증가해, 10년전에 비해 한육우 7.5%, 돼지 34.2%, 닭 5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을 가는 트랙터

전주 한지 뉴욕시장 진출

전주 한지로 만든 벽지가 미국 뉴욕에 진출한다. 전주 한지 제조업체인 천양제지는 최근 뉴욕의 대형 건축자재백화점에 한지 벽지 500만원 어치를 납품했다. 이 백화점은 전 세계의 유명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업체로, 한지 벽지를 매장에 전시하면서 고객요청에 따라 벽지를 추가로 주문할 예정이다. 이번에 수출한 벽지는 국산황토와 쪽으로 색을 내, 색깔이 곱고, 탁섬유가 엉겨붙게 해 쉽게 찢어지지 않으며, 도배하기도 편하게 만들어졌다. 천양제지는 지난 2007년 반기문 UN 사무총장 관저 접견실과 UN 한국대표부 메인 홀을 장식한 업체이기도 하다. 한편 전주 한지는 올해부터 전주시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장과 상장으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수료증과 표창장으로 납품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 300개의 해외공관도 전주 한지로 장식될 전망이어서 국내·외 판로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원권 올 상반기 일자리 3만3,358개 생겼다

올 상반기 강원도 내에서는 3만3,358여개의 일자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졌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업유치, 대형 프로젝트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경제성장형 일자리는 1만32개로 집계됐다. 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입에 의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1만1,683개, 도 및 시·군의 예산절감이나 공무원 급여반납 등을 통한 고통분담형은 5,585개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부차원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8,000여명이 고용되는 등 총 3만3,358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도는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외에도 상반기에 만들어진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집중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최근 일자리 창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만들기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 대책을 논의했다.

제주권 2012 세계자연보존총회(WCC) 유치전 본격화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가 ‘2012년 세계자연보존총회(WCC)’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희망과 꿈’을 주제로 한 유치 제안서를 지난 6월말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사무국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제안서를 통해 뛰어난 자연환경과 세계자연유산 보유, 생물권 보전구역 및 랍사르 습지보전구역 지정 등을 부각시켜



▲한라산 백록담

제주가 회의개최 최적지임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또 2005년 세계평화의 섬, 2007년 기후변화대응모델도시, 2008년 환경교육모델도시 지정과 국제적 표준회의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도 중점 홍보키로 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회의장과 중문관광단지 2km를 연결하는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운영하고, 공공자전거 500대를 배치하는 등 친환경적 회의장 및 교통시설을 마련하고,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을 위해서는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2012 WCC 개최지 결정은 오는 11월께 확정되고, 제주도는 멕시코 칸쿤과 최종경합을 벌이게 된다.

지식경제부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 지역발전+녹색성장 ⇒ 기업투자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6개 시·도지사, 경제 4단체 대표, 지역정책 유관부처 장관과 기업인 및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2회 지역투자박람회'를 열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은 지역투자박람회는 최근 투자 분위기가 위축된 상황을 감안하여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되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광역경제권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시상담관(6개) 운영, 투자유치설명회(16회) 개최 및 외국인투자가 현장방문을 실시해, 국내외 잠재투자자에게 최신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과 기업이 권역별 산업발전 비전을 공유했다. 또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녹색성장전략 및 4대강살리기 등 지역정책전시홍보관(7개) 운영 등 일반 국민 참관과 청소년 단체관람을 통해 지역발전의 미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투자박람회 때 선보인 지역발전 정책관을 둘러보는 이명박 대통령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에 354억원 지원

지식경제부는 전국 13개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전략 기획기술 ▶지역선도기술 ▶연계기술 ▶지역혁신기반구축 등 4개 지역전략 산업기술개발 분야에 총 354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신규지원한다. 특히 지역전략기획기술 분야에는 총 287억 원을 책정, 지역별로 기획된 80개 기술개발과제 중 40여개 과제에 향후 3년간 연간 7억 원 내외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핵심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대학·테크노파크·지역기술혁신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해당 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둔 창업 1년 이상의 기업이다. 이번 신규지원에서는 지역의 취약한 산업환경을 고려하여 일부과제에 대해 신청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야별 지원계획 〉

▶지역전략기획기술	고부가가치 핵심 융복합기술개발(40여개과제*, 287억원)
▶지역선도기술	지역 전략산업별 선도기업의 핵심기술개발(5개과제*, 33억원)
▶연계기술	지역 기업지원기관과 연계된 기업주도형 기술개발(15개*, 29억원)
▶지역혁신기반구축	지역경제 파급효과 큰 기술개발(2개과제**, 5억원)

* 지원과제수는 일부 변동가능, ** 광주, 대전지역 지원

* 사업의 제안요구서, 신청자격, 지원규모, 일정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국토해양부 농수축산물 직거래 가설점포, 신고로 설치가능

7월 중순부터 농수축산업용 건축물의 건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를 가설건축물로 보아 신고만 해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어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등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대한 설계·감리 등의 규제와 관광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고, 옥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헬리포트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간 거리 기준도 완화돼 공동주택간 자유로운 건물 배치로 창의적이고 디자인 좋은 공동주택들도 등장해 도시 미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상품권,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린다

전국적으로 희망근로 사업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희망근로 상품권」이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에서 본격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희망근로 상품권」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여자 급여의 일부를 현금 대신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권이다. 이 상품권은 지역의 전통시장과 동네 구멍가게 등 골목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근로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6개월 동안 3,840억원 정도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며, 액면가 1만원, 5천원, 1천원의 3종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발행·유통하되 유통기간은 3개월로 제한된다.



▲희망근로 상품권 1만원권

교육과학기술부 09년 기숙형고교 선정계획 발표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숙형고교 2009년 선정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국정과제 '다양하고 좋은 학교 더 만들기'로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고교는 농산어촌 학생들이 통학불편에서 벗어나 기숙사에 머물면서 안심하고 학업을 할 수 있게 한 학교형태다. 이번 계획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낙후지역의 실질적 교육력을 제고하여, 도농간 격차 해소는 물론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여 사교육비 절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정대상을 일반계 고등학교를 넘어서, 도농복합도시 및 사립고까지 확대하여 68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숙형고교 지정후 지역 내 중학교 졸업자 등 상위권 학생들의 대도시 이탈현상이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으며, 오히려 도시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군지역의 기숙형고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등 군지역의 학교가 '기피하는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교'로 탈바꿈해 가고 있다.

〈'09 기숙형고교 지정후 학생지원 사례〉

- 관내 중학교 상위권 졸업자 타지역 이탈현상 둔화
- 경남 함양군(중학교 전체) : '07년 15명 → '08년 10명 → '09년 4명
- 강원 정선군(정선중) : '07년 23명 → '08년 10명 → '09년 9명

- 중학교 상위권(10% 이내) 학생 비율 증가
- 충북 옥천고 : '08년 18% → '09년 29%
- 충북 진천고 : '08년 22% → '09년 29%

- 도서벽지학교의 급격한 학생수 증가
- 전남 신안군 도초고 : '08년 대비 '09년 학생수 22명 증가(26%)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의료원 진료환경 개선위해 464억 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산의료원 등 14개 의료원을 「지방의료원 시설개량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전국 보건 복지 시설의 증축 및 개·보수를 통한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경예산에서 2000억 원을 편성하고 이 중 464억원을 지방의료원에 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의료원은 시설보강 필요성 및 시급성 등 국고지원 필요성에 대해 실무 담당자 검토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으며, 이번에 지원하고 남은 예산 64억도 의료원별 시설 개량 수요를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지방의료원별 국고지원 내역 〉

(단위: 백만원)

지방 의료원	지원 사업	지원금액 (국비)	지방 의료원	지원 사업	지원금액 (국비)
부산 의료원	진료환경개선사업 외 2건	1,176	영월 의료원	본관 전면 리모델링	3,430
대구 의료원	본관외래/입원병동 환경사업 외 2건	3,401	충주 의료원	수술실 및 검사실 증축사업	2,100
인천 의료원	본관동 리모델링	6,370	홍성 의료원	기숙사 증축	2,800
경기도립의료원(수원병원)	중앙진료부문 환경개선 외 1건	2,199	군산 의료원	인공신장실 확충사업	105
경기도립의료원(포천병원)	장례식장 환경개선 외 4건	3,099	남원 의료원	지열원 냉난방시스템 설치 외 5 건	2,030
강릉 의료원	본관 및 부속건물 리모델링	1,820	목포 의료원	전면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	7,000
속초 의료원	병동(본관) 증축사업	3,103	순천 의료원	호스피스 증축사업	1,400
계			-		40,032

농림수산식품부

주요 농축수산물 29개
'품목별 연구회' 만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주요 농축산물 29개 품목의 생산·유통구조 개선 대책 등을 상시 연구하는 모임인 「품목별 연구회」를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연구회는 해당 품목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가공·소비·수출입·정책분야 등 품목산업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현장 종사자 뿐만 아니라 산업·문화계 등 비농업계 전문가까지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품목별 연구모임은 대부분 특정주제에 한정된 연구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품목별 생산에서 유통·가공·소비·수출입·정책분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능은 미흡했다. 농식품부는 연구회 초기단계에서는 농식품부의 품목 담당부서가 연구회 운영을 주관하되, 향후 품목별 대표 조직으로 연구회 운영을 넘길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회가 건의한 내용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정책 사례연구 - 광역경제권

영국·프랑스, 광역발전계획 추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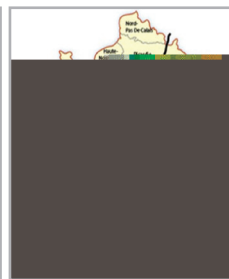
- Business·People·Place에 맞춘 발전계획-
- 중앙정부와 協約을 통해 예산확보·사업추진-

영국과 프랑스는 광역경제권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킨 대표국가다. 영국은 지난 98년 제정된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Act로 잉글랜드 42개 카운티를 9개 권역으로 광역화했다. 현재 9개 권역은 지역개발청(RDA)을 설치, 10년 째 운영 중이다. 각 권역의 면적(1.4만km)과 평균인구(560만 명)는 한국의 7개 광역경제권 평균과 비슷하다.

영국 RDA의 광역발전계획은 Business-People-Place에 초점을 맞춘다. RDA의 광역발전계획은 6개 중앙부처의 포괄보조금으로 추진되며, 사업결과는 중앙부처에 보고해야한다. 장기발전계획(10년 또는 20년)은 비전과 전략중심으로 수립하고, 실행계획(3년)은 별도 수립하지만, 정책수요자와 소통을 고려한 계획체계(Business-People-Place)에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영국(9개 RDA)



▲프랑스(22개 레지옹, 6개 대광역권 구상)

영국은 광역권간의 공동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초광역 발전협의체도 구성했다. 잉글랜드 북부 저개발지역에 위치한 3개 RDA(North East, North West, Yorkshire & The Humber)는 지난 2004년 3개 권역을 묶는 초광역개발기구(The Northern Way)를 설립, 공동계획 수립했다. 이 초광역기구는 인프라-지역혁신-기업유치 분야에서 현재 공동협력을 펼치고 있다.

프랑스의 광역화 정책은 레지옹(région)과 대광역권(super région)으로 요약된다. 현재 22개로 운영되고 있는 레지옹은 지난 82년 광역행정단위이자 광역계획권역으로 역할을 부여받았다. 대광역권(super région)은 지난 90년대 세계화, EU 통합에 따른 산물이다. 지역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 DATAR(現 DIACT)는 2000년 ‘2020 프랑스 장기발전구상’에서 기존 22개 레지옹을 6개 대광역권으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다. 6개 대광역권은 아직 구상단계로 DIACT를 중심으로 권역별 기초조사·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프랑스 레지옹은 광역발전계획인 국토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한다. 프랑스 북부 저개발지사인 노르드칼레(Nord-Pas de Calais) 레지옹은 지난 2006년 계획에서 개방과 협력·특화발전·사회통합·기후변화 대응 등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레지옹의 광역계획은 국가와 체결한 재정투자 약속인 계획협약(contrats de plan)으로 추진된다.

지역주도로 수립되는 영국과 프랑스의 광역발전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경제권이 서로 ‘계획협약’과 ‘성과협약’이라는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위 정책연구팀 송우경 연구위원



▲프랑스 북부 저개발지역인 노르드칼레 레지옹을 방문한 지역위 방문단



▲영국 Northeast RDA의 Ben FISHE 국장과 토론한 지역위 방문단